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8
----------	------

발의연월일 : 2020. 7. 17.

발 의 자 : 장철민 · 이상직 · 한병도  
김남국 · 박성준 · 윤미향  
김경만 · 황운하 · 김수홍  
이상민 · 최종윤 · 진선미  
정성호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수자원 보호 및 먹는물의 수질 개선을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일부업체에서는 영업부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체납하는 경우가 빈번함.

관할 시도에서는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유도, 재산 압류 및 공매,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인허가 등 경영활동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이 없어 부과된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의적 체납업체에 대한 강제수단으로 수질개선부담금 납무의 무자가 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 외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므로써 납부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

조 제10항).

법률 제 호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0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 ⑨ (생략)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환경부장관이나 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u>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u>	⑩ ----- ----- ----- ----- -- <u>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u> ----- -.
⑪ (생략)	⑪ (현행과 같음)